

【연구논문】

‘제왕적 대통령’*은 공화국의 자유를 위협하는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대통령제 정부론 고찰**

유종선

(울산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의 대통령제 정부론을 공화적 자유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제 정부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대통령 독재의 문제가 있고, 해밀턴은 이 주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사상가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The Presidential System)가 민주공화국의 적절한

* ‘제왕적 대통령’은 해밀턴 자신의 용어는 아니다. 그는 ‘군주적(monarchical) 위상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Schlesinger가 말하는 ‘제왕적(imperial) 권한이나 한국 정치에서의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에 부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Arthur M. Schlesinger, Jr., *The Imperial Presidency* (Houghton Mifflin, 1973). 다만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정부형태인지, 또는 이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경향만을 놓고 보면 특히 비서구권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¹⁾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독재 같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의 개헌 논의에서도 이의 권력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대통령제 이론을 검토해 보는 것은 나름 시의적절하고 시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해밀턴은 미국 건국 시기 강한 대통령제 정부를 옹호한 대표적 연방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사상은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The Founding Fathers)에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적어도 대통령제 정부에 관한 한 사상의 보편성과 탁월함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정되고 있다. 다만 한국 학계에서 해밀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드문 편인데, 이는 한국에서 정부형태, 특히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근본원리가 아닌 법과 제도, 저명한 해밀턴 연구자 스투어즈(Gerald Stourzh)의 표현을 빌면 ‘원리’(principles)보다는 ‘형태’(forms)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²⁾

1) 특히 Juan Linz의 일련의 업적과 논편들이 잘 알려져 있다. Juan J. Linz and 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Johns Hopkins UP, 1994); Juan J. Linz.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1990): 51-69.

2) Gerald Stourzh. *Alexander Hamilton and the Idea of Republican Government* (Stanford UP, 1970), 4-5. 한국 학계에서 해밀턴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업적 자체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료인 『연방주의 논설』(*The Federalist Papers*)조차 필자의 판단으로는 다소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번역 밖에 없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해밀턴 연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 제헌회의 회의록, 『연방주의 논설』 등 1차 원전을 인용한 정치학계의 최근 주목할 만한 해밀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손병권. 『

해밀턴의 대통령제 이론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그가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를 주장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옹호하는 주장과 더불어 이를 비판하는 주장의 근거로도 자주 인용된다.³⁾ 그는 종종 이 주제에 대해 명백히 모순적인 주장을 펴기도 하고, 그의 이론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도 다양하고 모순된 해석의 여지가 넓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가 공화국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본 연구의 주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미국 제헌회의 당시부터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논의에서도 강력한 대통령이 공화적 자유의 최소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인식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밀턴은 ‘군주적’ 외양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공화국과 공화적 자유의 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해밀턴은 일관되게 자신은 공화국과 공화적 자유의 지지자이며 강력한 대통령은 이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내용, 그리고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현대정치연구』 2.2 (2009); Sung Yup Kim. “Virtuous Characters in a Centralized State: A Reinterpretation of Alexander Hamilton’s Political Vision”. 『서양사연구』 37 (2007): 257-91.

3) 특히 2000년대 이후 미국 학계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명시적 법적 권한이 없이도 비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특권적 권한(prerogatives)이 대통령에게 있느냐를 둘러싸고 해밀턴을 인용하여 이를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의 논쟁, 그리고 최근 해밀턴을 둘러싼 미국 학계의 논쟁의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편들을 참조할 것. Clement Fatovic, “Constitutionalism and Presidential Prerogative: Jeffersonian and Hamiltonian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2004): 429-44.; Jeremy D. Bailey, “The New Unitary Executive and Democratic Theory: The Problem of Alexander Hamilt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4 (2008): 453-65.

해밀턴의 사상에서 강력한 대통령과 공화적 자유의 양립 가능성의 문제는 1960-70년대 미국 공화주의 논쟁, 특히 이 시기 해밀턴 연구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스투어쯔의 『해밀턴의 공화정부론』에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이 제시된 바 있다. 스투어쯔는 ‘권력과 자유의 모순’ - 또는 균형 - 이라는 관점에서 해밀턴의 사상을 논구하고⁴⁾ 공화적 자유를 위해 권력은 충분히 권위적(authoritative)이되 자의적(arbitrary)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화국 권력구조의 원리와, 힘과 ‘제국’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정부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해밀턴의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의 이러한 분석의 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의 결론 자체를 공유하지만 스투어쯔를 비롯한 해밀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공화국에서 자유의 의미와 조건,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해밀턴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1787년 미국 제헌회의(The Federal Constitutional Convention, Philadelphia, 1787)와 『연방주의 논설』*The Federalist Papers*에서의 해밀턴의 발언들이다. 이는 그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시기와 자료를 이렇게 한정함으로써 본 연구 주제에 대한 그의 사상이 전체로서 검토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2. 공화국과 자유의 역설

해밀턴은 적어도 표면적 발언만을 놓고 보면 자유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나는 누구보다 자유를 열정적으로 옹호하며,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⁵⁾고 말할 만큼 그는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삶에서

4) Stourzh, *Alexander Hamilton*, 5.

자유를 가치를 절대적으로 중시했다. 자유의 열정은 인간의 용감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고무하고 이는 다시 인간의 본성을 승화시킨다.⁶⁾ 또한 자유는 “신의 손에 의해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인류의 신성한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물론 홉스가 말하는 소위 ‘자연상태’에서도 “타인의 ... 자유를 빼앗을 도덕적 정당성은 누구에도 없고” “누구도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복종을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부정하는 이들을 그는 ‘홉스의 제자들’이라고 비난한다.⁷⁾ 적어도 이 점에서 해밀턴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로크의 자연권 사상의 신봉자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의 신성불가침성을 외치면서도 그는 정작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자유의 학자들이 논구할 수 밖에 없는 자유의 사법적 정의, 자유의 권리의 종류, 자유의 ‘자유주의적’ 혹은 ‘공화주의적’ 성격 등에 대해 그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에게 자유는 어떤 정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의 운동의 법칙, 하나의 활발한 ‘격정’, ‘자유외침’이 촉발하는 사고와 행동의 결과이다. 그에게 관심은 인간의 자유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과 이의 결과를 논구하는데 있다.

해밀턴의 정치사상에서 ‘인간 본성론’, 곧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는 정치과학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본성의 학문이야말로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5) 제헌회의 6월 26일 발언. Max Farrand, ed. *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Vol. I. 424. (Yale UP, 1910) (이후 *The Records*로 표기). 1787년 미국 연방제헌회의 회의록은 James Madison의 개인기록과, Madison의 기록에 다른 참석자들의 기록 및 관련자료를 보충하여 Farrand가 편집한 두 가지 회의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rrand의 편집본을 인용하기로 한다.

6) Alexander Hamilton, “The Farmer Refuted”. *The Works of Alexander Hamilton*. Ed. Henry Cabot Lodge. Vol. I. 63 (Putnam’s Sons, 1904) (이후 *The Works*로 표기)

7) *Ibid.*, p.62

유용하다”고⁸⁾ 말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그의 사상 또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의 위상에 대한 그의 생각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

먼저 해밀턴은 인간에 자유의 본성, 다시 말해 타인으로부터 명령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인간본성론을 종합해 보면 그는 자유를 인간 본성의 가장 근원적 추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인간 본성의 가장 근저에는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욕구, 곧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⁹⁾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본성이다. 탐욕, 질투심, 권력욕, 고상함, 인류에 같은 인간의 다른 본성은 이 근원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거나, 부차적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권력을 사랑’한다.¹⁰⁾ 물론 이는 말 그대로 인간의 생물적이고 유전적인 본성,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바 오직 죽음에 의해서만 그 운동이 멈추는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권력이 자기보존의 필수적 수단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권력을 사랑하고 이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보존의 목적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으로 ‘질투’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권력의 추구는 인간의 자기보존의 본성에 봉사하는 부차적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아니면 사악한가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해밀턴은 “인간은 대체로 보면 사악하다”¹¹⁾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최후의 결론은 아니다. 안전과 재산의 욕구가 충족되지

8) Alexander Hamilton, “Vindication of the Funding System”. *The Works*. Vol. III. 6.

9) Alexander Hamilton, “A Full Vindication”. *The Works*. Vol. I. 12.

10) 제헌회의 6월 18일 발언. *The Records*. Vol. I. 284.

11) 제헌회의 6월 22일 발언. *The Records*. Vol. I. 381.

못하거나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때로 사악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이의 근원적 욕구가 충족되고 보장되면 인간은 비로소 애국심, 인류애 같은 고상한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기심과 이타심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속하며, 이 둘이 반드시 모순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해밀턴은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타인에 예속되지 않으려 하는 ‘자유’의 본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자유의 본성이 자기보존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불가분적으로 엮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당연히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본성적 욕구를 또한 갖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유의 본성 뿐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본성도 있으며, 이 둘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 본성 - 또는 자유를 억압하는 본성 - 은 권력 추구라는 인간의 또 다른 본성과 만나게 된다. 왜냐 하면 권력이야말로 자유를 지키거나 억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력의 추구가 나의 자유를 향해 다가오는 권력에 대한 견제, 저항, 질투의 소극적 외양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지배적 권력의 추구로 나타나는 점이 다를 뿐이다.¹²⁾ 이 둘은 사실 권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

12) 해밀턴은 전자를 ‘권력의 질투’(jealousy of power), 후자를 ‘권력의 애정’(love of power)이라고 부른다. Alexander Hamilton, John Jay and James Madison, Intro.

는 것이며, 그 본질에 차이는 없다. “(권력의) 격렬한 사랑은 언제나 (권력의) 질투를 수반한다.”¹³⁾ 권력의 질투는 상황에 따라 언제나 적극적 권력의 추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당연히 성립한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기보존과 권력추구라는 인간의 근원적 본성과 연결시키면서 해밀턴은 국가 공동체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과 이의 조건에 대한 독창적 사상을 펼쳐 나간다.

해밀턴이 자주 자유를 독재(despotism) 또는 노예상태(slavery)와 대비하는 것을 보면¹⁴⁾ 그에게 자유는 무엇보다 자유를 억지하는 외부적 힘의 부재 상태를 말한다. 곧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으로부터 복종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 공동체에서 자유를 억지하는 외부의 힘은 독재의 폭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공동체에서의 자유는 독재가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소위 ‘신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독재는 인간의 자유의 본성, 또는 ‘권력의 질투’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유의 안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의 질투를 통해 지배적 권력을 비지배적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 선결의 과제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지배, 다시 말해 독재의 부재가 자유를 보장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해밀턴은 이에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지배의 권력에서 벗어난 자유는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이제 반대의 극단, 즉 무정부상태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

Edward Mead Earle, *The Federalist* No. 6. 27-28. (Modern Library, 1937?) (이후 *The Federalist*로 표기). ‘질투’는 해밀턴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The Federalist* No. 1, 5, 6, 17, 24, 25, 71에서 그의 해당 발언들을 참조할 것. 그를 비롯한 연방주의자들의 ‘정치적 질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Emery G. Lee. “Representation, Virtue, and Political Jealousy in the Brutus-Publius Dialogue”. *The Journal of Politics* 59.4 (1997): 1073-95

13) *The Federalist* No. 1. 5.

14) Alexander Hamilton, “The Farmer Refuted”. *The Works* Vol. I. esp. 66; 제헌회의 6월 26일 발언. *The Records* Vol. I. esp. 432 등 참조.

문이다. 자유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질투한다. 이는 매우 자주 권력에 대한 소극적 질투와 견제를 넘어 권력 자체에 대한 ‘편협한 불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자유의 열정은 자기보존과 권력추구라는 사활적 이익과 맞닿으면서 보통은 격정(passion)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제 자유의 열정은 이의 격정성, 폭력성과 정치적 질투의 성향에 의해 통제되기 어렵고, 통제되지 않은 자유의 열정은 일체의 권력을 부정하고 사회를 무법의 무정부상태로 몰아간다. 이 무정부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는 명목상 하나의 권리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자유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부의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독재와 무정부상태의 양 극단 사이에서 이의 활동과 안전이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¹⁵⁾ 독재와 무정부상태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주어진 자유의 외적 환경이 아니다. 독재는 자유의 과소 - 곧 권력의 과잉 - 의 결과이고 무정부상태는 자유의 과잉 - 곧 권력의 과소 - 이 빚은 결과이다.¹⁶⁾ 자유는 이의 과소와 과잉 사이에서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양 쪽의 위험한 적과 맞닥뜨리게 된다. 자유가 통제되지 않은 격정으로 흐르게 되면 사회는 무정부상태로 빠져 들게 되고 이 무정부상태는 다시 독재가 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자칫 자유-무정부상태-독재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자유는 그 열정이 지나치게 식어 있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격정으로 흐를 때에도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해밀턴의 주된 관심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다시 말해 자유의 격정이 무정부상태를 초래하여 자유를 파괴할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있다. 이는 그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공화국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밀턴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가 있는 모든 사회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다수와

15) 제헌회의 6월 26일 발언. *The Records* Vol. I. 432.

16) Alexander Hamilton, “The Continentalist”. *The Works* Vol. I. 246.

부유한 소수로 나뉘게 된다. 공화국은 사회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다수가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가난한 다수는 소수가 가진 재산과 권력을 질투하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이를 빼앗고자 한다. 이것이 공화국에서의 ‘민주적 걱정’(democratic passion), 자유의 열정의 본질이다. 공화국은 본질적으로 자유의 열망이 고조되어 있는 사회다. 자유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집단화된 정치적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놀라운 폭력과 혼란’의 성향을 가지게 되며 정부가 이 걱정과 닿게 되면 그들의 폭력성이 ‘들불처럼 번져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¹⁷⁾

공화국의 민주적 걱정, 자유의 열정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혁명의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혁명은 자유의 열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이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공화국의 당면한 과제가 된다. 혁명을 전후한 당시 미국의 상황이 그랬다.

지금 같은 혼돈의 시대, 사람들의 걱정이 비상하게 고양되어 있는 때에는 치명적 극단론의 위험이 크다. 대중은 그들을 인도할 충분한 이성 과 지식이 없다. 이들의 걱정은 폭정과 억압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권위에 대한 경멸과 무시로 이어지기도 한다. 좀 깨어 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절한 중도를 찾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 생각 없는 대중에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의 마음이 옛 제도와 관습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는 무정부상태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나 역시 독서와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바이다.¹⁸⁾

해밀턴은 공화국에서 한껏 고조된 대중의 이 ‘민주적 걱정’에 대해 기

17) 제헌회의 6월 18일 발언. *The Records* Vol. I. 288-89.

18) “From Alexander Hamilton to John Jay, 26 November 1775,” *Founders Online* (<http://founders.archives.gov/documents/Hamilton/01-01-02-0060>). [Original source: *The Papers of Alexander Hamilton* Vol. 1, 1768-1778. Ed. Harold C. Syrett. Columbia UP, 1961, 176-78]

본적으로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는 폭력적이고 무정부적이며 통제되기 어렵다. 이의 결과는 모든 권위가 무시되는 무정부상태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자유도 설 자리가 없다.

해밀턴의 주장을 따르면 공화국에서 자유의 질투는 두 개의 연속된 과정을 통해 자유에 위협을 가한다. 먼저 이것이 권력에 대한 견제를 넘어 권력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정부를 약화시키고 사회 전체를 무법의 무정부상태로 몰고 간다. 다음으로 이 고조된 자유의 열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선동적 정치가들(demagogues)이 등장하게 된다. 말하자면 다수의 정치적 질투가 소수의 정치적 질투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수를 이용하여 권력을 쥐게 된 이들은 처음에는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여 다수의 해방자로 나서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화국의 자유 그리고 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독재자로 전락하게 된다. 공화국의 자유의 관련하여 해밀턴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의 말을 빌면:

사람들이 흔히 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질투(또는 열정, jealousy)는 과격한 애정의 부수물이며 자유에 대한 고상한 열정(enthusiasm)은 매우 자주 편협한 불신으로 오염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 인민의 권리를 외치는 휘황찬란한 열정의 뒤에는 위험한 야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쉽게 잊어 버린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 곧 공화국의 자유를 뒤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민에 아부하다가 곧 선동가가 되고 결국은 독재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다.¹⁹⁾

이렇게 보면 공화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활적 과제는 바로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화국이 안고 있는 자유의 역설이다. 공화국에 이 역설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해밀턴의 대답은

19) *The Federalist* No. 1. 5-6.

명확히 부정적이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제헌회의에서 그가 “나는 공화국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의 전망에 대해 ‘절망한다’(despair)고 말했던 이유가 그것이다.²⁰⁾

그렇다면 공화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이상은 결국 포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해밀턴의 사상은 중대한 도전과 전환점에 서게 된다. 그의 대답은 이렇다. ‘넓은 공화국’으로는 이 자유의 모순과 역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새로운 원리 위에 건설된 새로운 형태의 공화국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공화국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동경해 온 이상적 공화국과 전혀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공화국과 공화국이 아닌 것의 경계에 위치한다. 해밀턴 자신의 표현을 빌면 이는 “공화국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킨”²¹⁾ 것이다. 당연히 ‘이는 공화적 정부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해밀턴은 자유를 위해 ‘공화적 정부’의 의미는 다시 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²⁾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는 말하자면 이 ‘새로운 공화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도이다. 해밀턴의 대통령제 정부론은 공화국에서 자유가 제기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3. ‘제왕적’ 대통령과 공화국의 자유

해밀턴이 그의 대통령제 정부론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은 1787년 미국 연방제헌회의(The Federal Constitutional Convention, 1787)에서였다. 당

20) *The Records* Vol. I. 288.

21) *The Records* Vol. I. 289.

22) 이러한 목적에서 ‘공화국’을 다시 정의하려는 해밀턴을 비롯 당시 연방주의자들의 사상적 노력에 대해서는 Paul Peterson, “The Meaning of Republicanism in *The Federalist*”. *Publius* 9.2 (1979): 43-75.

시 이 회의 참석자들의 가장 절박했던 관심사는 어떻게 안정적인 공화정부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화적 헌법과 이에 기초한 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지만 공화국은 속성상 안정적 정부를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 때문에 모든 공화국은 ‘수명이 짧고 돌연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에 대부분이 동의했다. 나아가 공화국의 이 같은 불안정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바로 민주주의, 다시 말해 자유를 열망하는 민주주의의 걱정이 공화국의 안정에 대한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불편함’, ‘민주주의의 해악’은 제헌회의가 본격 시작된 거의 첫 날부터 회의의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였고, 어떻게든 이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화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 인식이었다.²³⁾

이런 상황에서 6월 1일 일부 대표가 공화국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인의 집정관을 제안했을 때 참석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침묵이 흘렀다.”²⁴⁾ 회의의 기록자는 참석자 모두가 이 1인의 집정관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게 될지, 혹시 ‘최악의 군주’(the worst monarch)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본능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술하고 있다. 회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 1인의 집정관은 결국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왕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²⁵⁾

제헌회의에서 이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해밀턴이다. 특히 6월 18일 회의에서 그는 거의 하루 종일 발언권을 독점하

23) 미국 제헌회의에서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유종선,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다르다”: 미국 제헌회의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논쟁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 16집1호(2013) 참조

24) *The Records* Vol. I. 65.

25) Franklin의 제헌회의의 6월 2일 발언 참조. *The Records* Vol. I. 81-85.

며 강력한 1인 집행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지사(Governour)는 국가사무의 최고 집행권을 가지며, 임기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종신(during good behavior), 그리고 시민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그가 가지는 주요 권한에는 의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에 대한 거부권, 전쟁수행권, 조약 체결권, 정부 주요 관리에 대한 임명권, 사면권이 포함된다.²⁶⁾ 종신의 임기와 강력한 권한을 놓고 볼 때 해밀턴이 주장한 행정부 집행관의 모습은 당시 유럽 군주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라고 하면 세습이 아닌 선출로 직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인데, 선출로서 군주와 제후를 세운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군주라 불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해밀턴 스스로 자신이 주장하는 정부 수반은 ‘선거제후’(an elective monarch)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인정했다.²⁷⁾

이 실질적 ‘선거제후’가 과연 공화국의 정부형태로서 맞느냐 하는 것은 해밀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할 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공화국과 이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것이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고조된 민주적 걱정과 자유의 열정은 ‘놀라운 폭력과 혼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중의 끊임 없는 정치적 질투에 의해 약화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이들의 민주적 열정에 편승하여 야심을 채우려는 선동기들이 출현하여 공화국은 결국 대중적 폭정으로 타락하든지 극심한 내전으로 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²⁸⁾

그렇다면 결국 공화국의 사활적 과제는 민주주의의 이러한 걱정과 해

26) *The Records* Vol. I. 292. 제헌회의에서 행정부 수장의 직함은 Governor, Executive 등으로 호칭되다가 8월 23일 회의에서 직함style을 ‘미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경칭title을 ‘각하’*His Excellency*로 하기로 의결했다.

27) *The Records* Vol. I. 300-01.

28) *The Records* Vol. I. 288-89, 299-300.

약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에게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고 다수와 소수 사이에 일종의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강력한 집정관은 말하자면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해밀턴의 주장을 따를 때 1인 집정관이 민주주의를 견제하여 공화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집정관은 제2원(상원)과 함께 ‘민주주의의 걱정’이 몰아치는 제1원(하원)을 견제한다.²⁹⁾

둘째, 강력한 집정관은 의회 전체의, 다시 말해 제1원과 2원을 포함하는 의회의 민주주의적 성향을 견제한다.³⁰⁾

세번째로 - 사실은 이것이 그의 6월 18일 연설의 핵심이다 - 강력한 집정관은 공화국 내부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다시 말해 제1원과 2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여 사회 전체의 ‘항구적 의지’(a permanent will)를 실현한다.³¹⁾ 말하자면 강력한 집정관은 단순히 무엇에 대한 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통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해밀턴이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다른 많은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형태의 ‘영국식 모델’(the English model)³²⁾이었다. 해밀턴은 이를 ‘인류가 고안해 낸 최상의 정부’, 전체와 부분, 다수와 소수, 걱정과 지혜의 균형을 추구하고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정부형태라고 주장했다. 물론 건국 당시 미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익, 덕성, 가치들을 상호견제의 원리를 통해 반영하고 이를 통합하는 정부수성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정부수반-하원-상원의 안정적 정부형태는 미

29) *The Records* Vol. I. 289.

30) *The Records* Vol. I. 287; *The Federalist* No.71. 466.

31) 해밀턴의 6월 18일 연설을 위한 노트 참조. *The Records* Vol. I. 309.

32) *The Records* Vol. I. 288.

국의 역사적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중용의 정부’(a moderate government)³³⁾의 개념이었다.

해밀턴이 영국식 혼합정부, 제한군주제를 모델로 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구상했다고 하는 것은 『연방주의 논설』에서 소위 ‘일원성’(unity)과 ‘활력’(energy)에 관한 그의 논의를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³⁴⁾ 여기에서 그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활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정부 곧 행정부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efficient) 권한과 권한의 일원성(또는 통일성 - unity)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 권한의 일원성은 공동체의 단일한 의지와 공동체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며, 이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국가가 안정, 통합, 안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일원적이고 활기찬 정부는 형태를 막론하고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군주정은 자체로서 좋은 정부의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화국에서는 군주제 정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군주정의 이상적 정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부 형태를 구상해야 하는데,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해밀턴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에 직면한다. 곧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통령이 요구된다고 해도 그가 군주국의 군주와 유사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대통령제 정부를 과연 ‘공화정부’(또는 ‘공화적 정부’ - a republican government)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은 제헌회의 6월 18일 연설에서 해밀턴 스스로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공화적 정부체제인가?”³⁵⁾ 그의 대답은 물론 ‘그렇다’고 하

33) *The Records* Vol. I. 432.

34) *The Federalist* No.70. 454-63.

는 것이다. 공화국 또는 공화적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인데, 해밀턴은 시민들이 선거의 절차를 통해 정부의 주요 관리들을 임명한다면 이를 공화적 정부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기만 한다면 이는 공화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충분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 정부의 관리들을 시민들이 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선출 임명한다는 것은 물론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무리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 해도 어떤 공화적 원리나 정신에 맞지 않는 국가 또는 정부를 공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공직의 순환과 짧은 임기, 공직자의 권력의 제한과 이에 대한 견제장치 같은 것은 공직의 선출과 더불어 공화국의 양보할 수 없는 원리로 간주된다.³⁶⁾ 이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치권력이 공화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이 공화국의 정신이고 원리이다. 해밀턴의 주장은 분명 이 공화적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대통령제 정부는 공화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것이고, 공화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형태’와 관련된 질문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면 해밀턴의 답변은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공화적 정부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밀턴이나 그의 비판자들이 논쟁했던 것은 공화적 정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력한 대통령이 공화적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이것이 해밀턴의 강력한 집정관제 정부론에 대한 핵심적 질문이다. 강력한 대통령은 공화적 자

35) *The Records* Vol. I. 300.

36) *The Federalist* No.39. 194-95.

유에 대한 잠재적인, 그러나 강력한 위협이다. 이를 방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위의 질문은 강력한 대통령과 공화국의 자유가 최소한 잠재적인 모순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 물론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지만, 해밀턴의 주장을 따른다면 이 모순은 잠재적이되 절대적이지는 않다. 첫째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강력한 대통령은 자유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의 필수적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다. 강력한 대통령은 공화국 내부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고 정부에 활력을 부여하여 공화정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정부형태일 수 있다. 자유는 오직 안정된 정부에서만 이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강력한 대통령은 자유의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안정은) 무정부상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³⁷⁾

두 번째로, 강력한 대통령과 자유의 모순을 인정한다고 해도 강력한 대통령이 상징하는 정부의 안정과 효율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점이다. 만약 최소한의 정부 안정을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자유가 줄어드는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³⁸⁾ 또한 일단 권력을 위임한 후에 이를 무분별하게 제한함으로써 정부를 약화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해밀턴은 주장한다.³⁹⁾ 결국 정부의 안정과 자유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이지, 어느 한 가지를 위해 다른 하나를 전체로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대통령이 자유의 조건이 된다면, 정부의 안정과

37) *The Federalist* No. 70. 454.

38) *The Federalist* No.8. 42

39) *The Federalist* No. 26. 159; *The Federalist* No. 29. 180.

자유는 균형의 접점을 찾는 문제라는 식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대통령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권력이 자유에 더 안전하다고 하는 해밀턴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주의 논설』 70번 논설에서 그는 ‘권력은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수중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하는 ‘공화적 질투’(republican jealousy)의 격언과, 이것이 대통령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다수의 주 헌법에서 채택되고 있는 바 집행관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권력은 한 사람보다 다수의 수중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하는 공화적 질투의 격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격언이 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한 편의 이익이 다른 반대 편의 수많은 불이익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반대 주장을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 원칙이 행정관의 권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나는 … "집행권은 *그것이 하나일 때* 더 용이하게 제어될 수 있다"는 어떤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민의 질투와 감시에는 그 대상이 하나이어야만 자유가 더 안전하다. 한마디로, 집행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자유에 우호적이기보다 오히려 더 위협하다.⁴⁰⁾

위의 주장은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책임을 묻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 단일한 정부 권력이 자유에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권력은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야 한다는 원리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어느 한 곳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결국 분산된 권력 사이에서 자유가 실종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권력은 집중되면 독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어 서로 감시하게 해야 한다는 공화주의의 기본원리, 특히 동료 연방주의자 메디슨(James Madison)이 『연방주의 논설』 51번의 유명한 논설에서 주장한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론 해밀턴도 정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라는 원리 자체에 반

40) *The Federalist* No. 70. 461-62.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권력은 끝없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단계에서는 집중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권력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지, 더 이상 나누어서는 안 되는지 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과 행사 방식에 대한 상황적·규범적 판단의 문제이다. 해밀턴은 적어도 행정부의 집행권에 관한 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권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책임의 소재가 한 곳으로 모여 감시와 견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자유의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해밀턴은 ‘대통령 일인에 강한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면 공화국의 자유가 위협에 처한다’고 하는 ‘상식적’ 원리에 대해 이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점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집중하고 강화하는 것이 공화국에서 자유의 안전의 확보에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간다면, 집정관 1인에 강한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공화국의 안정과 자유의 수호에 절대 필요하다고 해도, ‘과도한’ 권력과 권한은 공화국의 자유에 최소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에서 ‘과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원론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부의 안정을 위해 충분히 강하되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권력은 독재로 이어지고 과소한 권력은 무정부상태를 몰고 온다.”⁴¹⁾

해밀턴이 대통령에 부여하고자 했던 권한은 이 중용 또는 균형의 범주 안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해밀턴 자신은 물론 그렇다고 주장한다.

41) Alexander Hamilton, “The Continentalist”. *The Works* Vol. I. 246.

그는 비판자들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해밀턴이 의회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이고 사면권 같은 ‘군주적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할 것, 그리고 제헌회의의 다른 참석자들, 특히 반연방론자들에 비해 대통령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를 두고 “(해밀턴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영국 왕의 권한보다 더 크고” “그의 이마 위에는 왕관이 빛나고” “하인과 시녀들에 둘러싸여 권위와 위엄을 뽐낸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해밀턴은 “사람들이 군주정을 혐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헌법의 반대자들)은 의도된 바 미국 대통령에 반대할 목적으로 사람들의 온갖 질투심과 두려움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⁴²⁾ 논쟁의 목적상 다소의 과장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상황에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제정된 연방헌법이 이전 연맹 규약에 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방정부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연방정부의 권한 자체가 미약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우려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의 ‘과대’가 아닌 ‘과소’였다. 의회나 정부 자체를 압도하는 제왕적 권한을 그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당시로서는 쓸데 없는 우려라고 해도 집정관의 권력이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분명히 반대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그러나 자유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은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집정관의 권력은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

42) *The Federalist*. No. 67. 436-37.

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정부 내 부처간 소위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들이다. 대통령의 경우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의 관리 임명권에 의회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짧은 임기와 정기적 선거이다. 이는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기 위한 전통적인 공화적 원리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에 의한 권력의 감시이다. 오늘날처럼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중집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대중이 직접 정부의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밀턴 당시에도 흔한 일이었다.

첫 번째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밀턴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밀턴은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제헌회의에서 해밀턴은 대통령은 오직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써 선출하고, 임기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중신으로’(during good behavior)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대중이 선거가 아닌 집회, 시위 등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리에 신임여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반대했다. 『연방주의 논설』에서 해밀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공화적 원칙은 공동체의 신중한 의견이 공동체의 일을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이들의 행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대중의) 예측할 수 없는 걱정의 바람, 모든 잠시의 충동에 무조건 영합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중은 그들의 편견에 아부하여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도록 대중에 아첨하는 이들의 교묘한 술책에 휘둘릴 수 있다. ... (이처럼) 대중의 이익이 그들의 바라는 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의 이익의 수호자로 임명된 이들의 임무는 (대중의) 일시적 환상에 맞서 대중이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⁴³⁾

43) *The Federalist* No. 71. 465.

해밀턴의 우려는 일관된 것이다. 그는 어떻게 공화국이 자유를 잃게 되는지에 대해 거의 편집증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곧 대중이 지닌 자유의 열정을 이용하여 야심을 채우려는 선동가(demagogue)가 공화국에서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화국에서 집정관의 독재는 집정관 스스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견제의 수단들이 거꾸로 독재자들에게 이용당하여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역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오늘날에는 반민주주의적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크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해악’이 공화국의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선거, 여론 같은 강력한 견제수단이 사라진다면 결국 대통령은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견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정된 임기와 강력한 권한으로 무장한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밀턴도 설파했듯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인간본성의 일반적 법칙’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소유욕, 권력욕과 명예욕은 물론, 이를 위해 때로는 정직함도 버리고 비굴함도 마다하지 않는다.⁴⁴⁾ 대통령이 선거와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면 그에게 맡겨진 신임, 안정된 임기와 권한 역시 당연히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어쨌든 대통령은 견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밀턴은 명백히 보수적 귀족주의자의 입장으로 돌아선다.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에 대한 궁극의 해결책은 결국 “능력과 덕에서 출중한” “연방 내 가장 훌륭한 인물”⁴⁵⁾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해밀턴은 어떤 사회든 그 안에는 ‘본성적으로’ ‘지배(또는 통치)의 열정’을 가진 ‘훌륭한 성품의 인물들’(the noblest mind)이 있다고 말한

44) *The Federalist* No.71. 465, 467

45) *The Federalist* No.68. 444.

다.⁴⁶⁾ 이들은 사람들이 공화국의 이상적 지도자로 묘사하는 고대 로마 공화국의 신시나투스(Quintius Cincinnatus)처럼 덕은 있지만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은둔형 귀족도 아니고, 권력 그 자체나 혹은 사익의 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정치꾼’도 아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과,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지위, 도덕적 의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한 자신들의 봉사에 대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최대의 가치는 ‘귀족으로서의 명예’다. 아마도 우리는 이들을 ‘정치적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⁴⁷⁾ 해밀턴은 이런 부류의 ‘정치적 귀족’이 공직, 특히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고, 이들이 그 직책에 오를 수 있느냐, 이를 담보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공화국의 성패를 가르는 시활적 문제라고 생각했다.⁴⁸⁾

해밀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즉각적인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사회에 그러한 ‘정치적 귀족’이 존재하는지, 이들의 선출을 담보하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해도 그가 과연 ‘인간 본연의 정치적 본성’, 사악한 ‘권력의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 답변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해밀턴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오래되고 평범한 정치학의 진리이다. 『연방주의 논설』 68번에서 그는 “정부 형태는

46) *The Federalist* No. 72. 470.

47) John C. Koritansky, “Alexander Hamilton’s Philosophy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Publius* 9.2 (1979): 103. 해밀턴의 정치적 귀족에 대한 논의는 *The Federalist* No. 68, No.72; Koritansky, “Alexander Hamilton’s Philosophy”. 103-04, 118-19 참조.

48) *The Federalist* No. 68. 444.

바보들이나 다투게 하라. 잘 통치되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말한 한 시인을 인용하면서, 이 ‘정치적 이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통치를 가져올 소질과 경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척도라고 말한다.⁴⁹⁾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 정부를 맡아야 좋은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정부 형태를 갖추어 놓아도 저급한 선동정치가가 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은 나쁜 통치, 나쁜 정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 형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여기에 뛰어난 인물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이고 자유의 안전이 담보되는 공화적 정부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요약하면, 해밀턴의 대통령제 정부론은 공화국에서 자유의 의미와 이의 실현방법에 대한 그의 특별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공화국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자유 그 자체이다. 과도한 자유의 열정은 정부를 약화시켜 자유의 안전에 불리한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상태를 몰고 온다. 이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서 독재의 야심을 가진 선동가들이 출현하고 결국 공화국은 이들에 의해 그 자유를 잃게 된다. 공화국에서 자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자유의 열정을 적절히 통제하여 정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제 정부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정부 형태이다. 이 목적을 위해 대통령에게는 군주에 버금가는 권한과 권위가 주어져야 하고, 대중의 자유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임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공화국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의 권력은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 그 직을 맡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해밀턴의

49) *The Federalist* No. 68. 444.

생각이었다.

4. 결론

해밀턴의 정치사상, 특히 그의 대통령제 정부론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현대에서 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된 것은 포콕(John Pocock), 베일린(Bernard Bailyn), 우드(Gordon Wood) 등 1960-70년대 미국 공화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였다. 이는 이전까지 미국 학계의 주류였던 미국 정치와 정치사상의 자유주의적 해석에 대한 반론이면서, 동시에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역사적으로 전쟁 같은 ‘인간사의 다양한 위기들’을⁵⁰⁾ 통해 극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벌어졌고, 여기에서 해밀턴의 강력한 대통령제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강력한 정부, 강력한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해밀턴이 공화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열정에 부정적이었고 공화국의 안전과 자유를 ‘사회의 탁월한 인물’의 ‘선의’에 맡기는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거론하며 그를 반민주-반공화주의자, 심지어 왕정론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⁵¹⁾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한국의 현실에

50) Schlesinger, *The Imperial Presidency*. 1.

51) 혹자는 해밀턴의 대통령 이론은 본질적으로 전근대적이며,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 위에 군주제의 옛 건물을 다시 세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William E. Scheuerman, “American Kingship? Monarchical Origins of Modern Presidentialism”. *Polity* 37.1 (2005): 24-53. 해밀턴 사상의 반민주주의적 성격, 특히 그가 주장한 ‘공화적 자유’와 ‘민주적 평등’의 모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Nadia Urbinati, “Competing for Liberty: The Republican Critique of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2012): 607-21; Colleen A. Sheehan, “Madison v. Hamilton: The Battle over Republicanism and

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주장한 그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정부형태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제라는 국가권력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일단 좀 더 신중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원래 의도한 형태와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건국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정부가 유지되어 왔고 이의 적실성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기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대통령제 정부의 본래 정신과 원리에 비추어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과 바람직한 권력구조, 이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해밀턴은 이러한 우리의 사상적 노력에 매우 유용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오늘날 민주공화국이 -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는 한국의 경우도 포함된다 - 처한 자유의 새로운 위협 앞에서 해밀턴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권력이 대중의 민주적 열정에 위협하게 다가간, 후자의 표현을 빌면 ‘정치적 질투가 정치적 신뢰를 압도하는’⁵²⁾ 그러한 시대이다. 한국에서 흔히 ‘광장의 정치’로 표현되는 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선동정치(populism)의 풍부한 자양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종의 양날의 검인 셈이다. 이 걱정의 민주주의에서 대중과 정치가는 해밀턴이 주장한 바 중용의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익과 좌익을 막론하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경향은 오늘날 민주공화국이 직면한 자유의 역설과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⁵³⁾ 해밀턴의

the Role of Public Opin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3 (2004): 405-24.

52) Emery G. Lee, “Representation, Virtue, and Political Jealousy”. 1192.

53) Rod Nordland, “Authoritarian Leaders Greet Trump as One of Their Own”. *New*

대통령제 정부론은 단순히 그가 강력한 대통령을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넘어, 공화국이 처한 이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선거와 정부운영의 과정에서 질투의 걱정이 - 대중 뿐 아니라 권력 또한 - 정치를 압도하는 것은 공화국이 자유를 잃게 되는 첩경이 될 수도 있음을 해밀턴은 경고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밀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걱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가 주장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유력하고 때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공화국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고 도리어 이의 수호자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그의 고찰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York Times. 1 Feb 2017 (https://www.nytimes.com/2017/02/01/world/asia/donald-trump-vladimir-putin-rodrigo-dutert-kim-jong-un.html?_r=0) (검색일 2017년 5월 30일); Max Fisher and Amanda Taub, “Western Populism May Be Entering an Awkward Adolescence”. *New York Times*. 25 April 2017 (<https://www.nytimes.com/2017/04/25/world/europe/populism-far-from-turned-back-may-be-just-getting-started.html>)(검색일 2017년 5월 30일)

- 54)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해밀턴을 선동 독재자에 맞서는 자유의 순교자로 그린 뮤지컬 ‘Hamilton’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선동정치의 위험에 대한 그의 경고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Joe Scarborough, “Alexander Hamilton’s Warning to 2016 Voters”. *The Washington Post*. 22 May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wp/2016/05/22/the-modern-populist-mutiny/?utm_term=.a217a824f39c) (검색일 2016년 11월 1일)

Works Cited

- 손병권.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현대정치연구』 2.2 (2009): 31-59.
- 유종선.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다르다": 미국 제헌회의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논쟁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 16.1 (2013): 179-98.
- Bailey, Jeremy D. "The New Unitary Executive and Democratic Theory: The Problem of Alexander Hamilt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4 (2008): 453-65.
- Farrand, Max, ed. *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New Haven: Yale UP, 1910.
- Fatovic, Clement. "Constitutionalism and Presidential Prerogative: Jeffersonian and Hamiltonian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2004): 429-44.
- Fisher, Max and Amanda Taub. "Western Populism May Be Entering an Awkward Adolescence". *The New York Times*. 25 April 2017. (<https://www.nytimes.com/2017/04/25/world/europe/populism-far-from-turned-back-may-be-just-getting-started.html>)(검색일 2017년 5월 30일)
- Hamilton, Alexander. "From Alexander Hamilton to John Jay, 26 November 1775". *Founders Online* (<http://founders.archives.gov/documents/Hamilton/01-01-02-0060>) [Original source: *The Papers of Alexander Hamilton*. Vol.1. Ed. Harold C. Syrett. New York: Columbia UP, 1961. 176-78]
- _____. "The Continentalist" *The Works of Alexander Hamilton*. Vol. I. Ed. Henry Cabot Lodge. G.P. Putnam's Sons, 1904.
- _____. "The Farmer Refuted". *The Works of Alexander Hamilton*. Vol. I. Ed. Henry Cabot Lodge. G.P. Putnam's Sons, 1904.
- _____., John Jay and James Madison. *The Federalist*. Intro. Edward Mead Earle. Modern Library, 1937.
- Kim, Sung Yup. "Virtuous Characters in a Centralized State: A Reinterpretation of Alexander Hamilton's Political Vision". 『서양사연구』 37 (2007): 257-91.
- Lee, Emery G. "Representation, Virtue, and Political Jealousy in the

- Brutus-Publius Dialogue”. *The Journal of Politics* 59.4 (1997): 1073-95.
- Koritansky, John C. “Alexander Hamilton’s Philosophy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Publius* 9.2 (1979): 99-122.
- Linz, Juan J. and 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4.
- _____.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1990): 51-69.
- Nordland, Rod. “Authoritarian Leaders Greet Trump as One of Their Own”. *The New York Times* 1 Feb 2017 (https://www.nytimes.com/2017/02/01/world/asia/donald-trump-vladimir-putin-rodrico-dutert-kim-jong-un.html?_r=0) (검색일 2017년 5월 30일)
- Peterson, Paul. “The Meaning of Republicanism in *The Federalist*”. *Publius* 9.2 (1979): 43-75.
- Sheehan, Colleen A. “Madison v. Hamilton: The Battle over Republicanism and the Role of Public Opin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3 (2004): 405-24.
- Scarborough, Joe. “Alexander Hamilton’s Warning to 2016 Voters”. *The Washington Post*. 22 May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wp/2016/05/22/the-modern-populist-mutiny/?utm_term=.a217a824f39c) (검색일 2016년 11월 1일)
- Schlesinger, Arthur M., Jr. *The Imperial Presidency*. Houghton Mifflin, 1973.
- Scheuerman, William E. “American Kingship? Monarchical Origins of Modern Presidentialism”. *Polity* 37.1 (2005): 24-53.
- Stourzh, Gerald. *Alexander Hamilton and the Idea of Republican Government*. Redwood: Stanford UP, 1970.
- Urbinati, Nadia. “Competing for Liberty: The Republican Critique of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2012): 607-21.

- 논문 투고일자: 2017. 05. 31
- 심사 완료일자: 2017. 06. 22
- 게재 확정일자: 2017. 06. 26

Abstract

**Is the ‘Monarchical President’ a Danger to
Republican Liberty?:
A Critical Review of Alexander Hamilton’s
Theory of Presidential Government**

Jong Sun Ryu
(University of Ulsan)

This article is a critical appraisal of Alexander Hamilton’s theory of Presidentialism, focusing on his sup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ical president’ and republican liberty. Hamilton’s theory of presidentialism is built upon his uniqu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the means of realizing liberty in a republic. The prime enemy of liberty in a republic is excessive jealousy of liberty itself. To secure liberty in a republic, such jealousy must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the stability of the government. A president with monarchical authority and power i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for this purpose. On the other hand, his power must also be checked and the title should go to the noblest mind in the society, so that a powerful president may not endanger liberty. In the context of the new threat to liberty in today’s democratic republics, Hamilton’s argument enlightens us to the compatibility of strong presidentialism with republican liberty.

Key Words

Alexander Hamilton, liberty, republic, democracy, the presidential government